



경복궁 '다례 체험'

맑고 포근한 13일 오후 경복궁 자경전을 찾은 시민들이 다례 체험을 하며 한가로운 오월의 봄날을 즐기고 있다. /연말뉴스

농식품부, UAE에 농업협력 대표단 파견

현지 농업 파악·협력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달 17일까지 UAE에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은 후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주요 시설,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간 구체적인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10명의 실사단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양국 정상은 농업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UAE 모하메드 왕세제는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식

량안보와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UAE는 연평균 6.25mm의 낮은 강수량과 40℃를 넘나드는 폭염(5~10월), 강한 햇빛과 잦은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사막에 최적화된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지 실사후 우리 농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농업에 열악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사막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싱가포르·태국에 '신남방정책' 확산

백운규 산업부장관, 오늘 현지 방문

정부가 그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행되던 신남방정책을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확대하는 계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태국 총리를 비롯한 각국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싱가포르, 한-태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백 장관은 우선 14일과 15일 양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제조기술 등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에너지 자립성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3D프린팅,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

명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한-아세안 FTA 이행위 의장국이자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로 스마트 네이션 구축·로보틱스·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어 16일과 17일에는 태국을 방문해 총리를 면담하고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국에는 현재 전자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 400여 업체가 진출해 있다"며 "이번 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기존 협력 산업 외에 전기차,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韓·日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성과없이 40년 흘러

석유개발 등 정책수립 절실

공동탐사 잠정중단... 2028년 종료협정 종료후 韓에 불리 가능성 커
종료 전 성과 거둬 협정 연장해야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켰다.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원 개발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탐사 및 상업 개발,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협

정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MI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외교부가 나서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작업 착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준비단 출범
8월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전달키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4개월 간 운영될 준비단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

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내정하고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 경주시청 등 관련기관·단체 및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명박, 고령·건강 탓 재판출석 힘들 듯

서울중앙지법, 23일 첫 정식재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일정 등 계획을 잡는다. 첫 정식재판은 23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두진술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증거조사 기일에 77세 피고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장시간 앉아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 조사는 약 14일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는 재판에서 한 시간에 10분씩 휴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인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입증 취지는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다. 별도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경우, 재판은 일주일에 3회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일주일에 4차례 국정농단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관련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7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재판에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지난달 6일 선고까지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9일 허리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 병원을 찾았다. 변호인단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타진한 이 전 대통령 역시 '출석률 100%'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 물증으로 방어하기 위해 검찰 증거에 동의한 만큼,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주요 증인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 날 그가 보인 태도가 당당했다"며 "지금 검찰이 영똥한 곳을 겨누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법종 기자 joker@